

CEO Information

2012. 3. 28. (847)

.

.

.

.

: (3780-8034)
europe.kim@samsung.com



삼성경제연구소

《 요 약 》

주목받는 북유럽 경제

선진국 경제가 2008년 글로벌 경제위기의 충격에서 아직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특히 EU는 성장동력의 약화로 저성장과 고용 악화, 정부부채 증가 등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다. 하지만 스웨덴과 핀란드 등 북유럽 국가는 경제적 역량이 강해 다른 유럽 국가에 비해 위기에 성공적으로 대처하고 있다. 이와 같이 높은 복지 수준에도 불구하고 양호한 경제성과를 거두고 있는 북유럽모델(노르딕모델)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북유럽 경제모델은 '성장과 복지'를 모두 중시


'성장'과 '복지'의 관점에서 보면, 현재 유럽에는 북유럽모델, 앵글로색슨모델, 대륙형모델, 지중해모델 등 4가지 경제모델이 있다. 북유럽모델은 성장과 복지를 모두 중시하고, 앵글로색슨모델은 복지보다 성장을, 지중해모델은 성장보다 복지를 중시한다. 대륙형모델은 성장을 강조하는 동시에 제한된 복지를 제공한다. 글로벌 경제위기 이후 북유럽모델은 성장과 복지 측면에서 여타 모델에 비해 우위를 보이고 있다. 북유럽모델은 사회적 합의주의를 바탕으로 정부, 기업, 개인이 상호 유기적으로 작동하는 특징이 있다.

4大 성공요인: 건실한 재정, 일하는 복지, 성장동력 투자, 강한 사회적 자본

북유럽 국가는 글로벌 경제위기에도 불구하고 신뢰를 통한 사회적 합의를 기반으로 끊임없이 개혁함으로써 '성장과 복지'를 동시에 달성했다. 북유럽 경제의 성공요인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① **건실한 재정**: 북유럽 국가의 재정은 여타 선진 경제권에 비해 매우 양호하다. 이는 1990년대 초반 금융위기로 악화된 재정을 건전화하기 위해 개혁정책을 강력히 추진한 결과다. 스웨덴은 1990년대 중반부터 재정흑자를 GDP 대비 2% 이상 유지하는 엄격한 재정준칙을 도입하는 한편, 지출을 억제하고 공기업 민영화와 경영효율화 등을 추진하여 성공적인 경제모델을 확립했다. 최근 북유럽 국가는 저성장과 인구 고령화에 대비해 세수를 충분히 확보하기 위해 경제활성화에 힘쓰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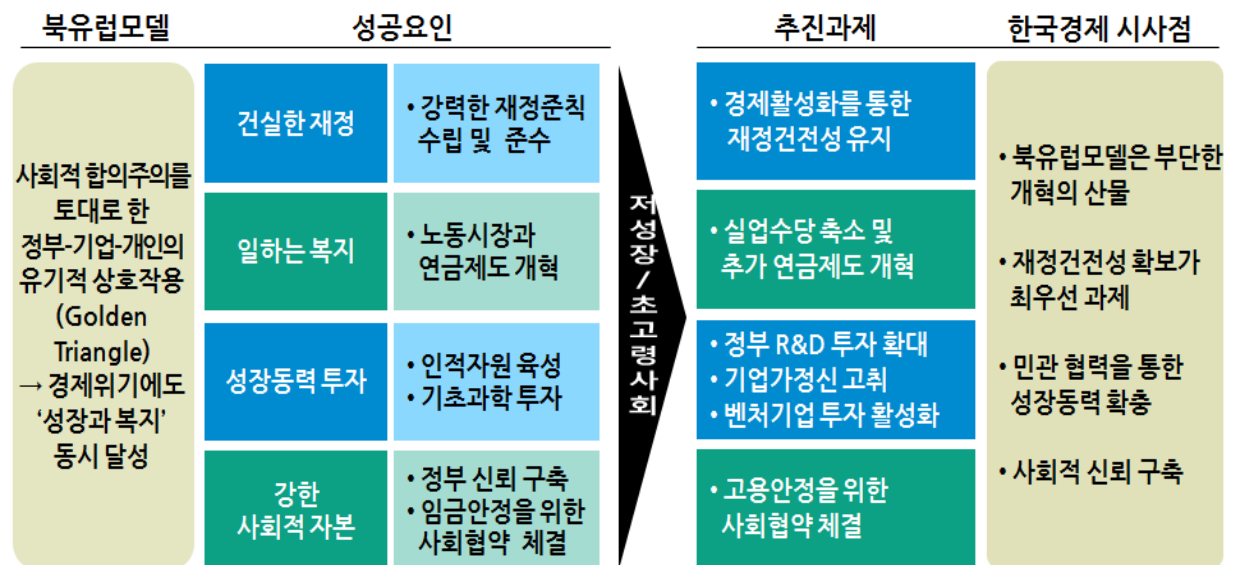
② **일하는 복지**: 북유럽 국가는 '高부담-高복지'를 완화하기 위해 실업수당과 연금지급 삭감 등 복지개혁을 추진했다. 덴마크와 스웨덴은 복지부담을 줄이기 위해 노동시장 개혁을 실시하고 있으며, 적극적인 노동시장정책으로 '일하는 복지국가'를 지향하고 있다. 그리고 스웨덴은 1998년의 연금개혁에 대한 국민의 불만에도 불구하고 퇴직연령 상향조정 등 연금제도의 지속성을 확보하기 위해 추가적인 연금개혁에 나설 계획이다.

③ **성장동력 투자**: 북유럽 국가의 주 성장동력은 글로벌 경쟁력을 지닌 제조업이다. 제조업의 성장을 주도하는 글로벌 기업은 전체 고용의 50% 정도를 차지할 정도로 북유럽 경제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또한 혁신 클러스터를 중심으로 산관학(産官學) 협력의 국가혁신체제를 구축해 ICT, 바이오, 헬스케어 등 첨단산업이 성장하고 있다. 최근 북유럽 국가는 기업가정신 고취와 벤처투자 활성화에 힘쓰고 있는데, 일례로 핀란드의 벤처기업  가 개발한 모바일 게임 앵그리버드(Angry birds)는 핀란드의 새로운 아이콘으로 떠오르고 있다.

④ **강한 사회적 자본**: 북유럽에는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한 사회적 합의 관행이 정착되어 있다. 노사정 사회협약을 통한 오랜 갈등 해소 경험이 사회적 신뢰 구축에 기여했다. 강한 사회적 자본은 국가경쟁력은 물론 경제성장에 긍정적으로 작용하며, 민감한 재정 및 복지개혁도 가능하게 한다.

성장동력 확충으로 경제 성장과 복지 증진을 동시 달성

북유럽모델은 개혁이라는 고통을 수반한 역사적 산물이며, 성장과 복지를 동시에 달성하기 위해 정부-기업-개인이 사회적 신뢰를 바탕으로 지속적으로 개혁한 결과다. 따라서 한국도 북유럽 경제모델의 성공요인을 잘 살펴서 교훈으로 삼아야 한다. 첫째, 이미 직면하고 있는 '저성장, 인구 고령화'에 대응하기 위해 북유럽의 '일하는 복지국가' 정책을 참고하여 **재정건전성 확보**를 최우선으로 해야 한다. 둘째, 충분한 재정 확보를 위해서는 **성장동력 확충**에 주력해야 한다. 구체적으로는 제조업 기술 융합을 통한 신성장산업 육성, 벤처기업의 기술역량 제고 등이 필요하다. 또한 북유럽의 혁신 클러스터와 같이 대기업-중소기업-외국기업이 참여하는 산업 클러스터를 통해 기업 생태계를 조성할 필요가 있다.



I. 주목받는 북유럽 경제

글로벌 경제위기로 선진국 경제가 고전 중

□ 선진국 경제가 2008년 글로벌 경제위기의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일부 유럽 국가는 재정위기에 직면

- 선진국 경제는 2008년 이래 성장동력이 약화되면서 성장률이 급격히 하락하고 실업률은 크게 상승

• EU와 일본은 각각 재정위기와 대지진으로 지난 4년간 연평균 성장률이 마이너스를 기록하고, GDP 규모도 위기 이전 수준을 하회

• 최근 고용사정이 개선되고 있는 미국과 달리, EU는 고용사정 악화로 2012년 1월 실업률이 10.6%를 기록(유로존: 11.1%)

글로벌 경제위기 전후 선진국 경제 변화

(단위: 십억달러, %)

항 목	시 기	EU		미국	일본	선진국 전체
			유로존			
경제성장률	2003~2007년	2.49	2.17	2.73	1.84	2.58
	2008~2011년	-0.11	-0.16	0.24	-0.72	0.17
실질GDP	최고치	14,879	10,915	13,326	4,814	36,831
	2011.4/4분기	14,580	10,685	13,430	4,641	36,819
실업률	2007.12월	7.2	7.6	5.0	3.8	5.5
	2012.1월	10.6	11.1	8.3	4.7	8.1

주: 최고치는 글로벌 경제위기 이전 기준으로 모두 2008년 1/4분기(단, 미국은 2007년 4/4분기)

자료: Global Insight

- 경제위기의 여파로 선진국들의 재정이 크게 악화되었으며, 일부 유럽국가는 정부부채가 급증하며 재정위기에 직면

• GDP 대비 정부부채 변화(2007년 4/4분기~2011년 3/4분기)¹⁾:

미국 64.9%→97.6%, 일본 163.4%→202.7%, 유로존 66.3%→87.4%, 그리스 107.4%→159.1%, 아일랜드 24.9%→104.9%

¹⁾ 미국과 일본의 자료는 Global Insight, EU와 유로존의 자료는 유럽통계청

북유럽 국가가 경제위기를 가장 잘 극복

□ 북유럽 3국(스웨덴, 핀란드, 덴마크)은 위기대처 역량이 강해 여타 국가보다 경제위기를 잘 극복

- 삼성경제연구소는 주요 41개국²⁾의 2008년 이후 경제지표를 분석하여 위기대처 역량과 위기대처 성과를 비교 평가

• '위기대처 역량'은 재무건전성, 균형성장, 자본조달능력, 정책효율성, 사회통합 등 5개 항목을 평가

• '위기대처 성과'는 실물경제(경제성장, 고용, 정부재정)와 금융시장 항목을 평가

- 북유럽 3국은 자본조달능력을 제외한 4가지 위기대처 역량이 강해 글로벌 경제위기를 성공적으로 극복

• 고용과 정부재정 측면에서 최상위권에 있으며, 경제성장과 금융시장 측면에서도 평균 이상을 달성

• 특히 스웨덴은 독일과 더불어 경제성장, 고용, 재정 측면에서 가장 건실한 면모를 과시³⁾

유럽 국가들의 위기대처 성과와 위기대처 역량



²⁾ 선진국 29개국과 신흥국 12개국

³⁾ 스웨덴은 EU 선진국 중 2008~2011년에 연평균 1% 이상 성장한 유일한 국가로, 2011년 말 현재 경제규모가 위기 이전 수준을 상회

- 북유럽 3국은 대외 불균형과 경쟁력, 대내 불균형 측면에서도 매우 건실한 모습

- 과거 3~5년의 대외 불균형과 경쟁력, 대내 불균형을 평가⁴⁾한 결과, 북유럽 3개국은 전체 10개 항목⁵⁾ 중 수출시장 점유율, 주택가격, 민간부채에서만 EU 평균을 하회

북유럽 경제모델의 성공요인을 주목

□ 높은 복지 수준에도 불구하고 양호한 경제성장을 거둔 북유럽모델 (노르딕모델)⁶⁾을 영미식 자본주의의 대안으로 주목

- 금융자본의 폐해로 소득 불균형이 심화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면서 영미식 자본주의에 대한 회의론이 부상

- '금융의 세계화'를 내건 新자유주의가 비판받으며 現 자본주의가 더 이상 유효하지 않다는 인식이 확산

- 글로벌 경제위기에도 불구하고 '경제성장과 복지'의 두 마리 토끼를 잡는 데 성공한 북유럽 경제에 관심이 증가⁷⁾

- 북유럽 복지모델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일부 회의적 시각에도 불구하고 세계 각국은 북유럽모델의 성공요인에 주목

□ '경제성장과 복지'를 동시에 달성한 북유럽 경제모델의 성공요인을 분석해 한국경제에 주는 시사점을 도출

⁴⁾ European Commission(2012). Alert Mechanism Report.

⁵⁾ 대외 불균형과 경쟁력 지표는 경상수지, 순대외투자자산, 실질실효환율, 수출시장 점유율, 1인당 노동비용 등 5개 항목이며, 대내 불균형 지표는 주택가격, 민간 신용대출, 민간부채, 정부부채, 실업률 등 5개 항목

⁶⁾ 노르딕은 노르웨이와 스웨덴으로 구성된 '스칸디나비아'에 덴마크, 핀란드, 아이슬란드까지 포함한 용어로, 1950년대 이래 정치, 문화, 제도 통합으로 스칸디나비아와 노르딕이 혼용. 본 보고서에서는 EU 회원국이 아닌 노르웨이와 아이슬란드를 제외한 3개국을 북유럽모델 국가로 규정

⁷⁾ 2012년 1월 25~29일 개최된 다보스 포럼의 '성장과 고용모델' 세션에서 참가자들은 글로벌 경제위기 이후 북유럽 경제모델이 보여준 뛰어난 경제적 성과 요인에 대해 활발히 논의

II. 북유럽 경제모델의 특징

유럽에는 4가지 경제모델이 존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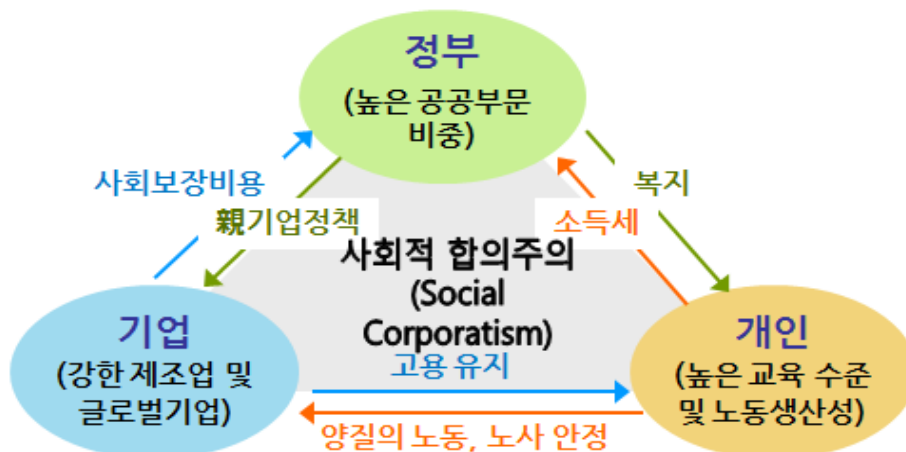
□ '성장'과 '복지'를 두 축으로 하여 북유럽모델, 앵글로색슨모델, 대륙형모델, 지중해모델 등 4가지 모델로 구분

- ① 북유럽모델(스웨덴, 핀란드, 덴마크): 성장에 중점을 두는 동시에 높은 수준의 복지를 제공
- ② 앵글로색슨모델(영국, 아일랜드): 복지보다는 성장에 중점을 두면서 저소득층에 최저 수준의 생계 보호를 실시
- ③ 대륙형모델(독일, 프랑스, 오스트리아, 벨기에, 룩셈부르크, 네덜란드): 성장을 강조하는 동시에 실업급여 등 사회보험 중심의 복지를 제공
- ④ 지중해모델(이탈리아, 스페인, 그리스, 포르투갈): 성장보다는 복지를 중시하여 사회복지제도가 관대

□ 북유럽모델은 사회적 합의주의(Social Corporatism)⁸⁾를 바탕으로 정부, 기업, 개인이 상호 유기적으로 작동하는 것이 특징

- 높은 교육 수준과 노동 생산성(개인), 수출 중심의 글로벌 기업(기업), 높은 공공부문 비중(정부)

북유럽모델의 구성 요소(Golden Triangl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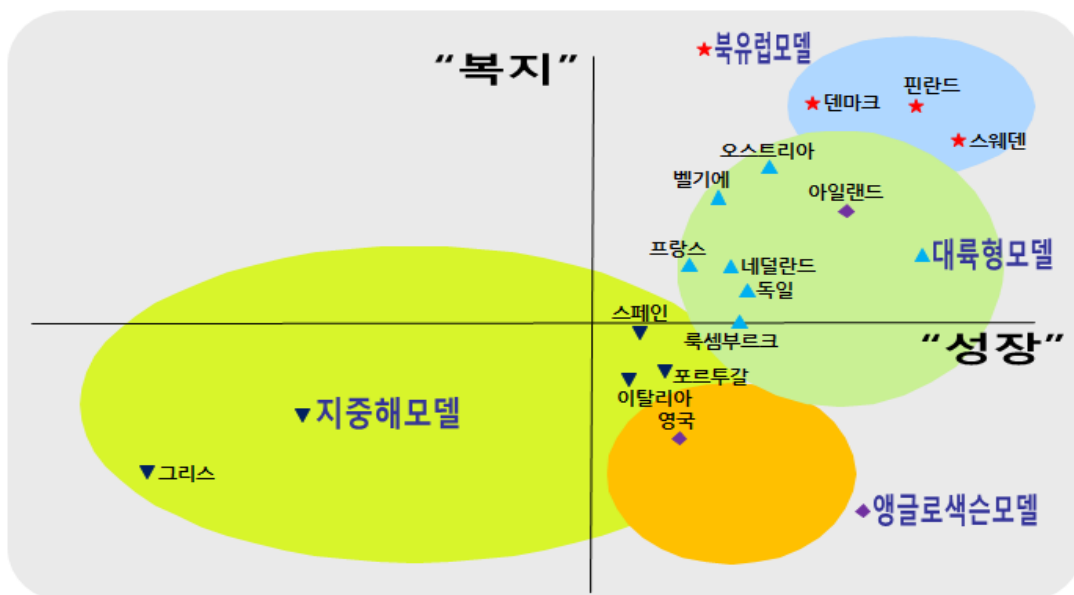
⁸⁾ 사회 구성원 간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 이해를 조정하고 사회 경제적 현안을 해결하는 체제

성장과 복지 측면에서 북유럽모델이 가장 우수

□ 북유럽모델은 최근 성장과 복지 측면에서 여타 모델에 비해 우수

- '성장'은 생산성에 기반한 경제성장을 의미하는 것으로 GDP성장률과 노동생산성 증가율로 평가
 - GDP 성장률(2010~2012년 평균): 북유럽 3.1%, 앵글로색슨 0.9%, 대륙형 2.2%, 지중해 -0.9%
 - 노동생산성 증가율(2010년): 북유럽 3.4%, 앵글로색슨 2.7%, 대륙형 1.4%, 지중해 1.1%
- '복지'는 소득, 계층, 성(性) 등의 평등을 의미하는 것으로 지니계수⁹⁾와 GDP 대비 사회보장지출 비중으로 평가
 - 지니계수(2000년대 말): 북유럽 0.255, 앵글로색슨 0.318, 대륙형 0.282, 지중해 0.318
 - GDP 대비 사회보장지출(2010년): 북유럽 31.2%, 앵글로색슨 27.3%, 대륙형 28.8%, 지중해 26.5%

유럽 경제모델의 성과 비교



자료: IMF WEO DB; OECD stat.

⁹⁾ 지니계수(Gini coefficient)란 계층 간 소득분포의 불균형 정도를 나타낸 수치로 0에 가까울수록 불평등 정도가 낮음을 의미

Ⅲ. 북유럽 경제의 성공요인

4가지 성공요인을 바탕으로 부단한 노력을 전개

□ 북유럽 국가들은 4가지 요인에 힘입어 경제위기 속에서도 '성장'과 '복지'를 동시에 달성

- ① 재정: 재정개혁을 통한 건실한 재정 확보
- ② 복지: 복지개혁을 통해 '복지천국'을 '일하는 복지국가'로 전환
- ③ 성장동력: 내실 있는 R&D 투자를 바탕으로 성장동력 확충
- ④ 사회적 자본: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한 사회적 합의

□ 현재 북유럽 국가들은 북유럽모델이 지속 가능할 수 있도록 추가적인 개혁을 추진 중

- '인구 고령화(대내요인)'와 '글로벌 환경 변화(대외요인)'로 인해 북유럽모델의 지속 가능성이 도전받고 있음
- 북유럽모델을 가능케 한 성공요인을 더욱 강화하기 위해 노력 중

북유럽 경제모델의 성공요인

성공요인	주요 내용	향후 추진과제
건실한 재정	• 강력한 재정준칙 수립과 준수	• 충분한 세수 확보
일하는 복지	• 노동시장과 연금제도 개혁	• 실업수당 축소 • 퇴직연령 상향 조정
성장동력 투자	• 인적자원 육성 • 기초과학 투자	• 정부 R&D 투자 확대 • 기업가정신 고취 • 중소기업 및 벤처기업 지원
강한 사회적 자본	• 정부 신뢰 구축 • 임금안정을 위한 사회협약 체결	• 고용안정을 위한 사회협약 체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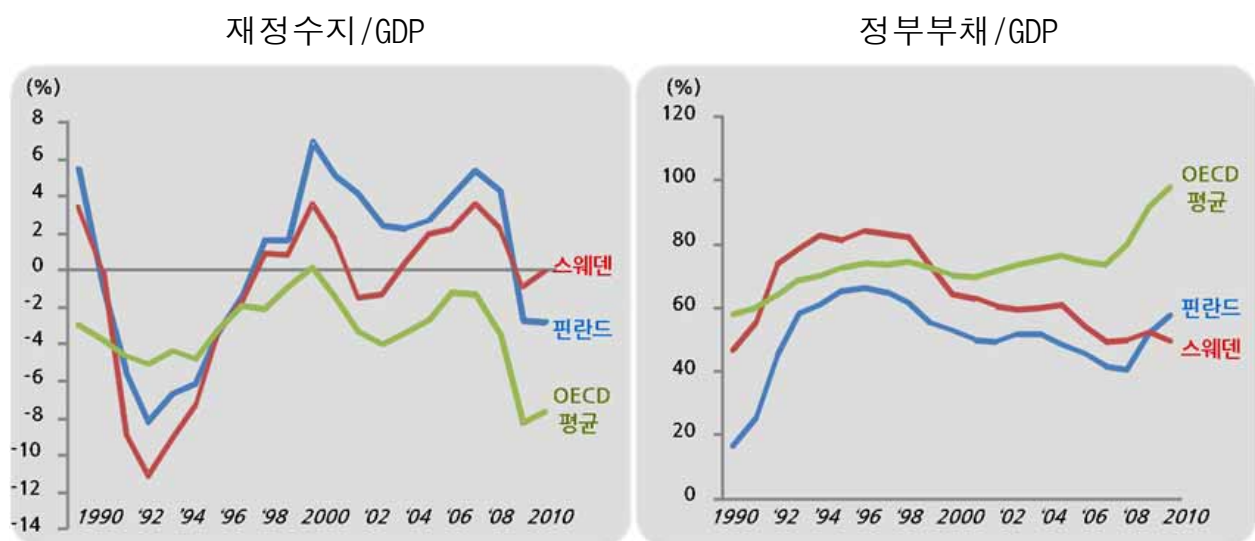
① 건실한 재정

금융위기 이후에도 건전한 재정 상태를 유지

□ 북유럽 국가의 재정은 여타 선진 경제권에 비해 매우 양호

- 북유럽은 금융위기 이후인 1998년부터 글로벌 경제위기가 발발한 2008년까지 대부분의 기간 동안 재정흑자를 지속
 - 스웨덴만 IT 버블 붕괴 이후 2002년과 2003년에 각각 GDP 대비 1.5% 및 1.3%의 재정적자를 기록
- 글로벌 경제위기 이후 재정수지가 적자로 돌아섰지만 적자 비율은 매우 낮으며, GDP 대비 정부부채 비율도 OECD 평균을 크게 하회
 - 2010년 재정수지/GDP: 스웨덴 -0.1%, 핀란드 -2.8%, OECD -7.7%
 - 2010년 정부부채/GDP: 스웨덴 49.1%, 핀란드 57.6%, OECD 97.9%

북유럽 국가의 재정 추이



자료: OECD stat.

지속적인 개혁을 통해 건전한 재정 달성

□ 북유럽 국가는 1990년대 초반 금융위기로 악화된 재정을 건전화하기 위해 강력한 개혁정책을 추진

- 1980년대 금융자유화 과정에서 형성된 신용 및 부동산 거품이 1990년대 초에 꺼지면서 금융위기가 발생하여 재정이 크게 악화
 - 위기 이전 흑자 상태이던 스웨덴과 핀란드의 재정은 1993년 GDP의 11.2%, 8.2%까지 적자가 확대되는 등 1991~1997년 중 적자를 지속
- 금융위기가 어느 정도 진정된 1990년대 중반부터 재정건전성 확보를 최우선 과제로 설정하고 재정개혁을 추진
 - 강력한 재정준칙¹⁰⁾을 도입하여 지출을 억제하고 공기업 민영화와 경영효율화 등으로 재정부담을 줄이는 한편, 복지지출을 조정

북유럽 국가의 재정건전화 정책

국가	정책 내용
스웨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995년 예산집행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재정건전화 추진계획 수립 · 퇴직연령 상향조정, 각종 보조금 축소, 의료보험 정부출연금 감축 · 석유세, 담배세 등 인상, 정부의 사회보장 부담비용 축소 · 통신, 우편, 철도, 석유 등 35개 공기업의 민영화 추진
핀란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방정부 교부금 감축, 가계부문에 대한 이전지출 축소 · 민영화 추진, 공기업 경영자율성 부여 및 정부지원 축소, 파산 허용 · 실업보험료 인상, 연금 납입기간 연장, 공무원 연금우대조치 폐지
덴마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과세 최저한도 인상 등 과세 대상 확대, 환경세 인상 · 재정지출 증가율을 성장률 이하로 억제(예산 항목별 증가 상한선 설정) · 실업급여 수급기간 단축, 취업노력의무 제도화 등 노동시장 개혁 실시

자료: 서정룡 (2000). "북유럽 금융위기 경험국의 경제개혁과 그 성과". 한국은행.;
 駐덴마크 대사관 (2009). "덴마크의 재정구조 개혁 개요".

¹⁰⁾ 스웨덴 정부는 구조적 재정수지를 GDP 대비 2% 이상 유지하기 위해 중앙정부의 이차지출을 제외한 명목지출의 상한을 설정하여 통제. 지방정부는 지출한도를 설정하지 않았으나, 2000년부터 균형 재정을 의무화. 지방정부는 재정적자 발생 시 2년 이내에 해소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중앙정부가 일반보조금을 감축할 수 있도록 규정

이탈리아와 스웨덴의 엇갈린 운명

- ▷ 1990년대 초 이탈리아와 스웨덴은 금융위기와 재정위기를 동시에 경험
 - 이탈리아는 1992년 정치적 혼란과 국가채무 누적으로 리라화에 대한 투기적 공격이 증가했으며, 스웨덴은 1990년대 초 버블경제의 붕괴, 금융기관 지원을 위한 대규모 재정지출 등으로 위기에 직면
 - 1993년 스웨덴의 GDP 대비 재정적자(11.2%)가 이탈리아(10.1%) 수준을 상회하고 사회갈등도 증폭되면서 북유럽모델이 한계에 직면
- ▷ 스웨덴은 포퓰리즘을 방지하는 한편, 강력한 재정개혁을 실시
 - 스웨덴은 전문성과 객관성을 지닌 제3의 전문기구(특별위원회 등)를 통해 민감한 재정 부문의 개혁을 단행
 - 이후 스웨덴은 계속해서 재정 건전성을 유지함으로써 글로벌 금융위기에 대처할 수 있었던 반면, 이탈리아는 정치리더십 부재에 따른 포퓰리즘적 재정정책으로 위기에 봉착

경제활성화를 통한 재정건전성 유지에 주력

- 북유럽 국가는 유럽경제의 저성장 장기화에 따른 재정 악화 가능성에 대비하여 경제 활력 제고를 위한 제반 정책을 추진
 - 저성장, 인구 고령화에 따라 재정건전성이 악화될 소지
 - 유럽 재정위기로 인한 북유럽 경제의 동반 저성장으로 세수 확보에 어려움이 예상
 - 높은 복지 수준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연금, 의료보험 지급 등 막대한 재정부담이 불가피
 - 재정건전성 유지를 위해 북유럽 국가는 경제활성화 노력을 강화
 - 북유럽 국가는 OECD가 권고한 법인세 및 소득세 인하 등 감세정책과 공공부문의 민영화 등을 추진

② 일하는 복지

복지부담을 줄이기 위한 개혁노력을 전개

□ 1970년대 이후 지속된 '高부담-高복지' 체제의 문제점이 부각되면서 1990년대 들어 복지개혁을 본격 추진

- 1990년대 초의 금융위기로 인한 재정 악화로 세계 최고 수준의 복지를 유지하는 데 한계에 봉착

· 스웨덴과 덴마크는 1970년대 중반에, 핀란드는 1990년대 중반에 이미 고령사회¹¹⁾에 진입하여 연금제도가 부실화될 우려

- 이로 인해 북유럽 국가는 보편적 복지체제를 유지하는 한편, 실업수당 및 연금지급 삭감 등 복지개혁을 추진

· GDP 대비 사회복지비용 변화(1995~2007년): 스웨덴 32.0→27.3%, 핀란드 30.7%→24.8%, 덴마크 28.9%→26.1%

1970년대에 스웨덴의 사민당을 몰락시킨 동화

▷ 스웨덴 작가인 아스트리드 린드그렌은 스웨덴 정부의 높은 세율을 풍자하는 동화인 『폼페리포사 인 모니스마니아』를 1976년(『엑스프레센』誌)에 발표했다. 이 동화가 주목받기 시작하면서 스웨덴의 사회보장제도에 대한 개혁 논의가 본격화

- 사민당은 사회보장제도 강화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일반소득세의 한계세율을 1974년 70.2%에서 1975년 87%로 인상, 동화에서는 자영업자의 사회보장세를 포함해 세금부담률이 소득의 102%에 달하는 현실을 풍자

- 사회적 불만이 고조되자 사민당 정부는 결국 1976년에 일반소득세의 한계세율을 83%로 인하했으나 지지율 하락으로 44년 만에 총선에서 패배

(자료: Astrid Lindgren lives on in Swedish attitudes. (2007.11.9.). *Sweden.se*)

¹¹⁾ 총인구에서 65세 이상 인구가 차지하는 비중이 7%, 14%, 20% 이상인 사회를 각각 고령화사회, 고령사회, 초고령사회라고 명명(WHO)

□ 북유럽 국가는 노동시장을 개혁하고 적극적인 고용정책을 펼치며 일자리 창출에 주력

- 덴마크는 1990년대 유연안정성(Flexicurity)모델¹²⁾을 토대로 적극적인 노동시장정책을 추진

· 경영상 이유에 따른 해고를 인정하되 재교육과 구직활동 기준을 강화해 실직자들의 재취업을 지원

· 실직자들이 구직활동을 계속하지 않으면 실업수당이 빠르게 감소하는 제도를 도입

- 스웨덴은 2006년 보수당 집권 이후 노동시장 개혁을 지속 추진하여 복지 의존도를 줄이고, 근로유인을 촉진

· 실업수당제도에 강제적 노동시장 참여를 의무화하는 규정을 도입하고 병가수당과 실업수당에 대한 기업의 관리 책임을 강화

□ 스웨덴은 인구 고령화와 관련된 재정불안 요인을 해소하기 위해 1990년대부터 연금개혁을 초당적으로 추진

- 1998년에 기존의 보편적 기초연금제도를 폐지하고 저소득층 대상의 확정급여형 연금인 최저보장연금을 신설

- 연금제도를 확정급여식(정해진 급여 보장)에서 확정기여식(기여한 만큼 지급)으로 전환하여 국가의 연금부담을 경감

· 평생 납부한 연금 기여액과 예상수명을 바탕으로 지급액을 산정하고 경제성장률에 따라 연금 지급액을 조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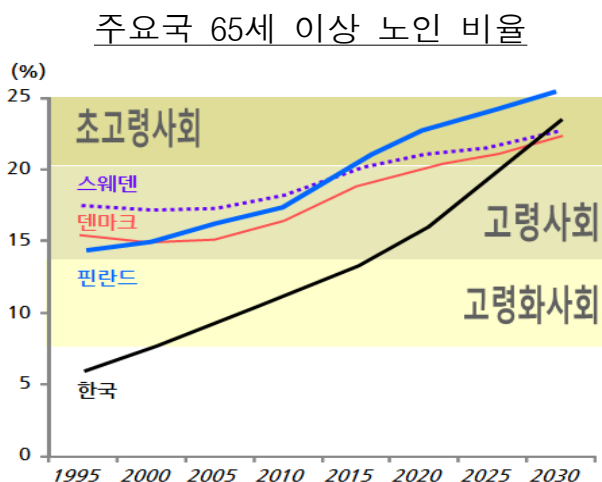
- 연금 초과 적립분에 대해서는 개인이 수익과 위험을 고려해 투자 모델을 선택하는 개인연금계정을 설립

¹²⁾ 유연안정성(Flexicurity)모델이란 노동시장 유연성(Flexibility)과 사회보장제도의 안정성(Security)을 결합한 정책 모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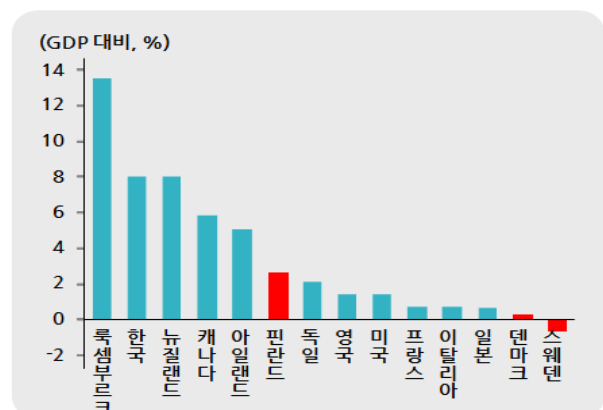
'일하는 복지국가'를 위해 지속적으로 개혁

□ 북유럽 국가들은 초고령사회를 앞두고 '일하는 복지국가'를 구현하기 위해 추가 개혁을 추진

- 덴마크는 경기둔화와 함께 노동시장정책의 취약점이 노출되자 유연성과 안정성의 조화를 위해 노동시장정책을 개혁
 -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덴마크의 실업자가 급증하면서 재교육-재취업 제도의 효과성과 질적 수준이 저하¹³⁾
 - 실업자의 구직 활동을 촉진하기 위해 관대한 실업수당제도를 개혁¹⁴⁾
- 1998년의 연금개혁에 대한 불만에도 불구하고 스웨덴 정부는 연금 제도의 지속성 확보를 위해 추가 연금개혁에 나설 방침
 - 연금제도 개혁 이후 2010년에 처음으로 연금 지급액이 감소되면서 퇴직자들은 現 연금정책이 노년에 대한 불안을 고조시킨다고 비판¹⁵⁾
 - 퇴직자들의 연금제도에 대한 불안감이 고조되는 상황에서 퇴직연령을 높여 연금기금을 확충하자는 논의가 대두



연금지출비 변화 전망(2010~2050년)¹⁶⁾



자료: UN Population Division; Merola, R. & Sutherland, D. (2012). Fiscal Consolidation. OECD.

¹³⁾ Anderson, T. M. (2011). A flexicurity labour market in the great recession—the case of Denmark. Paper presented at the CPM-ROA conference on flexibility of the labour market.

¹⁴⁾ 2010년 6월부터 실직자에게 실업급여를 지급하는 기간을 4년에서 2년으로 축소

¹⁵⁾ 2010년과 2011년에 지급된 연금이 각각 3%와 4.3% 축소

¹⁶⁾ 캐나다, 일본, 한국, 뉴질랜드, 미국은 2000~2050년 증가분

③ 성장동력 투자

기초가 든든한 산업 기반을 확보

□ 우수한 인적지원과 R&D 투자가 북유럽 제조업 경쟁력의 원천

- 글로벌 경쟁력을 지닌 제조업이 주된 성장동력 역할
 - 스웨덴과 핀란드의 제조업 비중은 각각 GDP의 16.7%와 18.7%를 차지하고 있으며, 수출 비중도 여타 유럽국가를 상회¹⁷⁾
 - 스웨덴은 전자, 금속 등 엔지니어링과 화학 분야에서, 핀란드는 정보통신산업에서 세계적인 경쟁력을 보유
- 내실 있는 교육제도를 통해 공급되는 우수 인력이 높은 생산성으로 연결
 - 25~64세 인구 중 대학 이상 이수 비중¹⁸⁾:
핀란드 37%, 덴마크 34%, 스웨덴 33%, EU 평균 27%
- 다른 선진국에 비해 R&D 투자 비중이 높은 수준
 - GDP 대비 R&D 투자 비중(2009년)¹⁹⁾:
핀란드 4.0%(2위), 스웨덴 3.6%(3위), 덴마크 3.0%(6위)

글로벌 기업과 혁신클러스터가 산업 경쟁력을 뒷받침

□ 세계적인 경쟁력을 지닌 글로벌 기업이 강한 제조업의 근간

- 스웨덴과 핀란드 모두 대기업(250명 이상 고용)이 전체 고용의 50% 내외를 차지함으로써 규모의 경제를 실현

¹⁷⁾ GDP 대비 제조업 수출 비중: 덴마크 53.9%, 스웨덴 51.3%, 핀란드 39.2%, 영국 32.4%, 이탈리아 28.8%, 그리스 22.9%

¹⁸⁾ OECD (2011). Education at a Glance 2011: OECD Indicators.

¹⁹⁾ OECD stat.

- 북유럽 국가는 글로벌 경쟁력을 지닌 다수의 기업을 보유

- 스웨덴: (통신장비), (가전), (가구) 등
- 덴마크: (계약), (풍력), (완구) 등
- 핀란드: (통신), (산전) 등

□ 클러스터를 중심으로 한 산관학 협력의 국가혁신체제가 경쟁력의 원천

- ICT²⁰⁾ 클러스터를 보유한 스웨덴과 핀란드는 정보통신강국으로 도약

- 시스타 사이언스시티(유럽 최대 ICT 클러스터)와 울루 사이언스파크 (노키아의 R&D 거점)는 북유럽을 대표하는 혁신클러스터

- 옅살라-스톡홀름 생명공학 벨트(바이오리전: Bioregion)는 연구, 생산, 상업화 등의 과정을 한 번에 수행할 수 있어 스웨덴 바이오 산업의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작용

- 이 지역에는 스웨덴 생명공학 종사자들의 60%가 근무하며, 550개의 순수 생명공학 회사, 200여 개의 관련 회사가 집중

- 덴마크도 코펜하겐을 스웨덴의 말뚝, 룬드 지역과 연계하여 메디콘 밸리(Medicon Valley)를 조성

- 전 세계 클러스터와의 제휴를 확대하고, 개인 맞춤형 의약품 개발 등 차별화에 주력

정부의 R&D 투자에 부응하여 기업도 新성장동력에 대한 투자를 강화

□ 스웨덴정부는 산업경쟁력 제고를 위해 R&D 투자를 확대

- 2008년에 스웨덴정부는 「연구혁신법안 2009~2012」를 통해 연구 및 혁신 활동에 4년간 142억크로나를 추가 투자하기로 결정


²⁰⁾ ICT는 정보통신기술(Information & Communication Technology)의 약자

- 정부의 R&D 투자효과를 높이기 위해 상업화를 강조
 - 정부의 기존 지원 대상인 대학과 연구소에 전략적 투자 분야(의학, 첨단 기술, 기후변화)를 신설한 후 총 추가 예산의 3분의 1을 투입하여 혁신기술 투자를 강화
- 또한 정부는 기업의 R&D 투자 활성화를 위해 기초연구 분야에 대한 투자도 지속적으로 확대
 - 대학의 연구역량을 논문 발표 및 인용 건수와 외부 연구펀드 유치 규모로 평가해 공공 R&D 자금을 지원하는 경쟁체제를 도입
- 북유럽의 글로벌 기업은 정부의 새로운 R&D 투자정책에 부응해 고부가가치 산업에 대한 투자를 강화
 - 스웨덴 발렌베리 가문의 지주회사인 **AB**는 헬스케어 분야에 대한 투자를 확대
 - 2007년에 인수한 메디컬 기업인 **AB**의 지분을 62%에서 2011년 96%까지 확대하고, 2009년에는 제약회사인 **SOBI**, 2010년에는 헬스케어 서비스 업체인 **AB**를 차례로 인수
 - **AB** 발렌베리 재단은 스웨덴의 과학 경쟁력이 약화되고 있는 점을 우려하여 발렌베리 아카데미 펠로우스 프로그램을 신설
 - 2012~2016년간 125명의 젊은 과학자들에게 12억크로나 규모의 투자자금을 지원하고 산학 협력 프로그램을 강화할 계획
- 최근 북유럽 정부는 저조한 기업가정신 고취와 경제 다각화를 위해 중소기업 지원책과 벤처기업 투자 활성화 방안을 마련
 - 핀란드에는 신생기업의 중요한 투자자로 활동하는 엔젤투자 그룹이 2개, 중소기업의 성장을 돕는 성장자본은 GDP 대비 0.4%에 불과

- 핀란드 정부는 엔젤투자자에 대한 세제 혜택, 기업가정신 교육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공공기술혁신 기금인 (Tekes)는 벤처기업에 대한 투자를 2배로 확대할 계획

- 구조조정으로 노키아를 떠난 우수 인력이 창업을 하면서 성과를 내기 시작


핀란드의 새로운 아이콘: 앵그리버드


- ▷ 핀란드의 모바일 게임 앵그리버드(Angry Birds)를 개발한 가 새로운 벤처신화의 아이콘으로 부상

- 앵그리버드는 2009년 말~2011년 말 5억건 이상의 다운로드 수를 기록하는 등 세계적인 성공을 거두었는데, 이를 통해 핀란드에서는 창업에 대한 인식이 변화



(앵그리버드 홈페이지)

- 2011년 3월 는 2곳의 헤지펀드와 1곳의 엔젤펀드로부터 총 4,200만달러의 투자를 확보하고 이를 바탕으로 사업을 확장

- ▷ 핀란드 정부는 와 같은 중소 벤처기업을 적극 지원해 핀란드 대표기업의 공백을 메운다는 전략

- 엔젤투자자에 대한 세제 혜택 제공, 기업가정신 교육, 벤처기업 투자 확대 등

④ 강한 사회적 자본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한 사회적 합의 관행이 정착

□ 북유럽 3국은 다른 유럽 국가에 비해 강한 사회적 자본을 보유

- 사회적 자본(social capital)²¹⁾은 사회 구성원이 상호 협력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고 갈등을 최소화할 수 있는 역량을 제공

²¹⁾ 사회적 자본이란 개인 간 협력을 촉진함으로써 사회의 생산성을 높여주는 신뢰, 규범, 네트워크 등 사회적 관계에서 발생하는 일체의 무형자산으로, 세계은행은 사회적 신뢰도가 10% 상승하면 경제성장률은 0.3%p 증가한다고 분석(이동원 외 (2009), 『제3의 자본: 사회적 자본은 어떻게 증진되는가?』. 서울: 삼성경제연구소.)

- 강력한 사회적 자본이 북유럽 3국 국가경쟁력의 근간

• 사회적 자본 지수: 북유럽모델 7.78 > 대륙형모델 7.11 >
 앵글로색슨모델 6.87 > 지중해모델 5.58

• 2011년 세계경제포럼 국가경쟁력 순위(139개국):
 스웨덴 2위, 핀란드 7위, 덴마크 9위

□ 오랜 역사의 사회적 합의와 상호 신뢰가 강한 사회적 자본을 형성

- 노사정 사회협약을 통한 갈등 해소 경험이 사회적 신뢰 구축에 기여

• 1938년에 체결된 스웨덴의 「살트세바덴 협약(Saltsjobaden Agreement)」²²⁾과 1960년 말 이후 체결된 핀란드의 「소득정책협약(Income Policy Settlement)」이 대표적인 사회협약

• 1990년대 이후에도 핀란드는 사회협약(1993년), 스웨덴은 고용안정을 위한 산업협약(1997년)을 체결하여 경제위기에 대처

- 투명한 정부행정을 바탕으로 사회 전반에 부정부패가 적고 소득, 계층, 성(性) 간 불평등도 낮아 사회적 신뢰가 강하게 형성

- 높은 신뢰관계를 바탕으로 이해관계자가 정부의 정책형성 과정에 참여하는 사회적 합의주의가 정착

□ 정부에 대한 강한 신뢰와 사회적 합의가 있어 재정 및 복지 개혁이 가능

- 복지정책의 변화는 사회적 합의를 거치도록 하여 복지개혁에 대한 사회적 갈등을 최소화

• 스웨덴은 12년 동안의 오랜 합의과정을 통해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여 퇴직연금제도 개혁에 성공

²²⁾ 1938년 12월에 노조연맹(LO)과 사용자단체(SAF) 간에 이루어진 대타협의 산물로 노사협력의 역사적 전기로 평가. 정식 명칭은 「산업평화에 대한 기본협약」

IV. 시사점

북유럽 경제는 부단한 개혁을 통해 성장과 복지를 달성

□ 북유럽모델은 개혁이라는 고통을 수반한 역사적 산물

- 북유럽모델은 정부-기업-개인이 사회적 신뢰를 토대로 균형과 조화를 이루어 작동되는 경제모델

• 북유럽모델의 구성요소 간에 균형이 깨지거나 관계가 약해질 경우 역사적으로 위기가 발생하거나 위기가 장기화

- 성장과 복지를 동시에 달성하기 위해 지속적인 개혁 노력을 전개

• 2003년 IMF는 스웨덴 복지모델을 '땅에 떨어지기 않기 위해 끊임없이 날갯짓하는 호박벌(bumblebee)'에 비유²³⁾

□ '성장과 복지의 롤 모델'로 북유럽모델의 성공요인을 벤치마크할 필요

- 정부-기업-개인의 경쟁력 확보와 더불어 사회적 자본 확충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

- 이미 직면해 있는 '저성장, 인구 고령화'에 대응하기 위해 북유럽의 '일하는 복지' 정책을 참고

• 북유럽 국가들의 '일하는 복지'는 '재정건전성 확보'와 '높은 수준의 보편적 복지'를 동시에 달성할 수 있는 현실적인 선택

- 충분한 재정 확보가 복지국가의 전제조건이므로 이를 위해 성장동력 확충에 주력

²³⁾ Thakur, S. et al. (2003). *Sweden's welfare state: Can the bumblebee keep flying?* IMF.

재정건전성 확보가 최우선 과제

- 한국도 복지수요가 급격히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므로 재정건전성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
 - 한국의 복지충족도²⁴⁾는 OECD 국가 중 하위권인 데다가, 고령화, 장애연금 등 취약계층 소득보장정책, 소득양극화 해소정책 등 시행으로 복지수요가 확대될 전망
 - 더욱이 공기업 부채 지원, 남북 통일 등 예상치 못한 추가적 재정수요가 발생할 경우를 대비하여 평소에 재정을 건전하게 관리할 필요
 - 재정개혁 시기를 놓쳐 재정이 악화되면 다시 건전성을 회복하기가 매우 어려움
 - 중남미 국가들은 1980년대 초의 외채위기를 벗어나는 데 10년 이상 소요되었으며, 일본은 1990년대 후반 재정개혁 시기를 놓친 이후 공공사업, 사회보장 지출 증대 등으로 재정이 지속적으로 악화
- 향후 10년간의 재정운용이 중요한 만큼 재정준칙 도입을 검토할 시점
 - 고령화 등 인구구조 변화로 증가하는 재정규모를 법적 강제성을 지닌 재정준칙 없이 정부 재량만으로 관리하기는 어려움
 - 재정여건이 상대적으로 양호한 시기에 재정규율을 확립하려는 노력을 기울여야 재정위기 방지에 효과적
 - 한 국가에서 성공한 준칙이 반드시 다른 국가에서도 성공하는 것은 아니므로 준칙 도입 시 정치·경제 환경을 신중하게 고려
 - 재정준칙을 도입하면 재정운용에 제약이 따를 것이므로 다양한 이해관계자 간 합의를 도출할 필요

²⁴⁾ 복지충족도란 복지수요 충족을 위한 제도 및 시스템 구비 정도를 의미

정부와 기업이 협력하여 성장동력 확충에 주력

□ 성장동력 확충을 위해서 기술 융합의 신성장산업을 적극 지원

- 글로벌 경쟁력을 지닌 제조업 분야의 기술역량을 여타 산업에 융합할 수 있도록 직간접적으로 지원하는 비즈니스 혁신정책을 강화

• OECD는 R&D 투자에 대한 금융지원, 민간투자 활성화를 위한 R&D 투자세액공제, 창업 지원 등을 제시

□ 대기업과 벤처기업이 서로의 장점을 기반으로 상호 윈윈 관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벤처기업의 기술역량을 제고

- 대기업의 사업 경험과 보편적인 기술 역량에 벤처 특유의 혁신성과 특정 분야의 기술력이 연계될 때 시너지가 발생

• 일방적으로 벤처를 지원, 육성하기보다는 실제 필요 분야에 대하여 최우수 기술을 발굴하고 벤처 창업을 지원

- 벤처 인증, 투자 단계에서 아이디어의 혁신성 및 잠재적 가치와 시장 관점의 평가 기준을 엄정하게 적용하고 검정하는 체제를 구축

□ 글로벌 기업이 산업클러스터에 적극 참여함으로써 국제적 경쟁력을 지닌 기업 생태계를 조성

- 클러스터를 기반으로 산학연 공동연구 및 글로벌 R&D 네트워크를 구축함으로써 산업구조를 고도화

• 북유럽의 대표적인 혁신클러스터에는 (시스타), (예테보리), (울루) 등 대기업의 역할이 크게 작용

- 외국기업의 투자 확대로 지역경제 활성화, 기술이전 및 일자리 창출 등의 경제적 효과가 기대 **CEO**

【 Trend 】

< 1 >

		3. 20	3. 21	3. 22	3. 23	3. 26
환율	원/달러(종가기준)	1,124.90	1,129.50	1,129.40	1,135.30	1,141.60
	엔/달러(뉴욕시장)	83.410	83.675	83.465	82.620	82.475
	달러/유로(뉴욕시장)	1.32330	1.32360	1.32110	1.31970	1.32800
금리	회사채(3년AA-, %)	4.40	4.43	4.43	4.44	4.42
	국고채(3년, %)	3.60	3.63	3.63	3.64	3.62
	CD (91일, %)	3.54	3.54	3.54	3.54	3.55
	LIBOR (3개월, %)	0.47415	0.47415	0.47365	0.47315	0.47265
국제 원자재 가격	두바이(S, \$/배럴)	123.17	123.09	121.99	122.18	122.91
	WTI(S, \$/배럴)	105.74	107.03	105.21	106.68	107.15
	CRB 현물가격지수	502.34	501.28	499.94	501.06	..
주가지수(KOSPI, 종가)		2,042.15	2,027.23	2,026.12	2,026.83	2,019.19
한국 5년만기 CDS 프리미엄		117	117	123	122	..

< >

	2009년	2010년	2011.10월	2011.11월	2011.12월	2012.1월	2012.2월
제조업생산 증가율 ¹⁾	-0.2	16.8	6.7	6.3	2.9	-1.9	..
평균가동률	74.4	80.9	78.8	78.4	77.0	80.6	..
서비스업생산 증가율	1.8	3.9	3.7	3.0	1.6	0.9	..
실업률	3.6	3.7	2.9	2.9	3.0	3.5	4.2
실업자(만명)	88.9	92.0	73.6	73.0	75.4	85.3	104.2
총취업자 수(만명)	2,350.6	2,382.9	2,467.3	2,458.9	2,412.5	2,373.2	2,378.3
소비자물가 상승률	2.8	3.0	3.6	4.2	4.2	3.4	3.1
생산자물가 상승률	-0.2	3.8	5.6	5.1	4.3	3.4	3.5
생활물가 상승률	2.1	3.4	3.6	4.5	4.4	3.3	2.8
수출(억달러, FOB) ²⁾	3,635.3	4,663.8	466.4	460.5	489.2	412.1	463.9
(증감률)	(-13.9)	(28.3)	(7.6)	(11.6)	(10.8)	(-7.3)	(20.6)
수입(억달러, CIF)	3,230.9	4,252.1	427.3	430.1	455.2	434.4	448.7
(증감률)	(-25.8)	(31.6)	(15.5)	(11.2)	(13.6)	(3.5)	(23.3)
()	2,699.9	2,915.7	3,109.8	3,086.3	3,064.0	3,113.4	3,158.0

1) 통계청 (2012. 2. 29.) “2012년 1월 산업활동동향”에 의거하여 작성

2) 관세청 (2012. 3. 15.) “2월 월간 수출입 동향(확정치)”에 의거하여 작성

< >

	2009년	2010년	2011년 1분기	2011년 2분기	2011년 3분기	2011년 4분기	2012년 1분기
GDP 성장률 ¹⁾	0.3	6.2	4.2	3.4	3.5	3.4	..
민간소비	0.0	4.1	2.8	3.0	2.0	1.2	..
설비투자	-9.8	25.0	11.7	7.5	1.0	-3.4	..
건설투자	3.4	-1.4	-11.9	-6.8	-4.6	-4.0	..
SERI 소비자태도지수 (연간은 연말 기준)	53.2	51.8	49.2	47.2	47.5	45.4	44.2
SERI 경제행복도지수 ²⁾ (연간은 연말 기준)	0.474	0.658	0.669	0.689	0.693
개인금융자산(조원) ³⁾	1,946.5	2,176.4	2,212.4	2,257.9	2,216.9	2,303.4	..
개인금융부채(조원)	854.8	937.3	949.0	1,050.1	1,070.7	1,103.5	..
채정수지(조원)	-17.6	16.7	-4.4	-2.3	16.8
경상수지(억달러) ⁴⁾	327.9	282.1	26.1	54.9	69.0	126.6	..
총대외지불부담(억달러) ⁵⁾	3,457	3,594	3,824	3,993	3,956	3,984	..

1) GDP 성장률은 전년동기 대비

2) 2010년 4/4분기부터 소득분배 부문 하위지수 산정법 개정으로 과거 자료와 상이

3) 개인금융자산 및 부채는 자금순환계정 기준

4) IMF 국제수지통계매뉴얼(BPM5) 기준

5) IMF, World Bank 등 9개 국제기구가 마련한 새로운 편제기준, 분기별 발표

< >

(전년동기 대비, %)

		2009년	2010년	2010년 4분기	2011년 1분기	2011년 2분기	2011년 3분기	2011년 4분기
미국	GDP 성장률 ¹⁾	-3.5	3.0	2.3	0.4	1.3	1.8	3.0
	실업률 ²⁾	9.3	9.6	9.4	8.9	9.1	9.0	8.5
	소비자물가 ²⁾	-0.4	1.6	1.5	2.7	3.6	3.9	3.0
일본	GDP 성장률 ¹⁾	-5.5	4.4	-0.6	-6.9	-1.2	7.1	-0.7
	실업률 ²⁾	5.1	5.1	4.9	4.6	4.6	4.1	4.5
	소비자물가 ²⁾	-1.4	-0.7	0.0	-0.5	-0.4	0.0	-0.2
유로 지역	GDP 성장률 ¹⁾	-4.1	1.8	0.3	0.8	0.2	0.1	-0.3
	실업률 ²⁾	9.6	10.1	10.0	10.0	10.0	10.3	10.6
	소비자물가 ²⁾	0.3	1.6	2.2	2.7	2.7	3.0	2.7
중국	GDP 성장률 ¹⁾	9.2	10.3	9.8	9.7	9.5	9.1	8.9
	실업률 ²⁾	4.3	4.1	4.1	4.1	4.1	4.1	4.1
	소비자물가 ²⁾	-0.7	3.3	4.6	5.4	6.4	6.1	4.1

1) 미국, 일본, 유로지역 GDP 성장률은 전기 대비 연율, 중국 GDP 성장률은 전년동기 대비

2) 실업률 및 소비자물가의 경우 분기 말 기준